|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참가자 2** | |
| **이 름** | 박\*\* | **이 름** | 김\*\* |
| **소속(학과)** | 행정학과 | **소속(학과)** | 행정학과 |
| **학 번** | 2010 | **학 번** | 2010 |
| **연락처** |  | **연락처** |  |
| **이메일** |  | **이메일** |  |
| **팀 명** |  | | |
| **주 제**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저희는 같은 과 동기입니다.  저희는 둘 다 소주 청하를 좋아하기 때문에 팀명은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회가 끝난 후 청하 한 잔을 마실 계획입니다.  1학년때부터 같은 수업을 듣고 동아리 활동을 해왔습니다.  공격적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의 조합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 마지막으로 열정을 불태워보고자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우승을 목표로 합니다. 우승은 우리의 것!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선거연령 하향 찬성 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선거권의 의미와 현재 이 논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선거권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선거권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을 투표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나, 투표권과 선거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투표권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와 주민투표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에 선거권이 먼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뒤 2007년에 국민투표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첫째, 선거연령의 하향이 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선거권 연령의 하향조정이 보통선거권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의무와 권리 부여의 형평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들어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첫째, 선거연령의 하향은 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 중에 하나는 교육문제, 더 좁게는 입시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상은 만18세,19세의 입시생들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던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지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투표권의 부여는 그들의 이익을 결집시키고 표출하는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어떤 세대든 각자 자기가 속한 세대의 문제점이나 이슈, 그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등은 그 세대의 구성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청소년 세대를 보는 시각이나 청소년 세대에 대한 정책보다는 청소년 자신 세대가 청소년 세대를 보는 시각이나 청소년 세대에 대한 정책이 월등히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이전에 반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익과 세대를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통해 보통선거권의 확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달은 보통 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성별,인종,소득이라는 선거권의 제약요소들이 하나하나 폐지되었으며 오늘날 남아있는 선거 규제 조항은 연령이 유일합니다. 선거권 부여의 최대화와 선거건 제한의 최소화’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만19세라는 기준은 보통선거권을 지나치게 좁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오늘날 oecd국가 중 폴란드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연령의 기준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와 의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만 18세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18세에게 국가의 의무를 지우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미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17세, 운전면허는 18세, 혼인적령의 경우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로 규정하며 대부분의 성년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역시 만 14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만 18세이상의 나이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합니다. |
| **반대**  **입론** |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4조에서 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 연령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는 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정치적 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을 독자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교육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현 19세 선거연령제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근거에 보충하여 저희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연령 햐향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직 시기상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적인 보통선거권 확대의 흐름에 비추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투표연령 하향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을 보십시오. 입시위주로 편성되고 운영되는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치사회화 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바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기 보다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치논리가 학교 교육에 개입되어 교실을 정치의 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짜여진 방식대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논리의 개입은 자칫 학생들을 편향된 정치선동에 방치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자치를 통해 민주적 의사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바람직한 선거 연령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선거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그 햐향의 적정 수준이 어디인지는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중학생들까지 하향해야 합니까? 초등학생까지 하향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면 18세까지 하향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선거 연령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보통선거권 확대의 논리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에서 당장의 선거 연령 하한은 무리가 있으며 , 선거 연령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입법재량의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 종료하겠습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 **참가자 2** | |
| **이 름** | | 이\*\* | **이 름** | 이\*\* |
| **소속(학과)** | | 철학과 | **소속(학과)** | 철학과 |
| **학 번** | | 2012 | **학 번** | 2012 |
| **연락처**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이메일** |  |
| **팀 명** | |  | | |
| **주 제** |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 안녕하세요. 팀 This입니다. 철학을 전공하는 이민재, 이정택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저희 둘은 평소에도 토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공 특성상, 토론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도, 서로의 생각을 듣고 각자의 생각을 개진하는 대화를 자주하는 편입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토론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편입니다. 다만, 저희 둘 모두 정형화된 공식 토론에 임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차 한잔 하며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까지 모교인 성균관대학교를 다니며 만났던 수많은 학우들이 있습니다. 그 학우들 모두, 명석하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전공, 학년, 캠퍼스를 뛰어넘어 모교의 학우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함께 각자가 가진 생각을 교환하고 싶어 본 토론대회에 지원합니다. 토론은 자신의 생각을 보다 심도 있게 만들어주고, 나와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즐거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 | |
| **찬성**  **입론** | 입론합니다.  우리 팀은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하며, 현재 선거연령인 만 19세를 ‘적어도’ 만 18세로 낮출 것을 주장합니다. 선거연령 인하는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까지 ‘참정권’을 확대 시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2013년 최모씨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권을 침해한다” 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당시 헌재는 6대 3으로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법이 18세의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입니다. 당시 합헌 판결의 주된 근거는 18세의 청소년들의 지적, 사회적 시각이 완전히 형성됐다고 볼 수 없고,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청소년’ 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에서 아직은 선거에 참여 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 18세의 국민을 ‘미성숙’ 한 존재로 단정 짓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팀은 현재의 만 18세의 국민을, 투표를 하기에 충분히 ‘성숙’ 했다고 볼만한 다음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째,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청소년들은 정치에 많이 참여해왔습니다. 과거에는 4.19 혁명, 6월 항쟁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오늘날에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국선언’, ‘촛불시위’ 등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식을 고양해 나간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입니다.  둘 째, 더욱이, 현 시점은 언론과 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정치 정보’ 에 관한 접근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스마트폰 등 최신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정치 이슈를 접할 수 있게 되었음은 자명합니다. 요컨대, 역사적으로도 나름의 정치의식을 형성해 행동해왔던 청소년들이 최신 시사 정보도 쉽게 습득 할 수 있게 된 지금,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을 어른들보다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숙’, 즉 청소년의 자질과 관련된 쟁점과 더불어, ‘선거연령’을 둘러싼 세계적 추세, ‘선거연령 인하’ 가 미칠 사회적 영향 같은 외부적 쟁점 또한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이와 같은 외부적 쟁점을 고려해도 ‘선거연령 인하’ 가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먼저 ‘선거연령’ 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18세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전통이 오래된 서구 국가들에서는 선거연령을 낮출 만큼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적 토대와 교육이 잘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여겨지는 국가들 마저도 한국보다 선거연령이 낮습니다. 이들 국가 보다 한국의 민주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도 이제 선거 가능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참정권 확대를 야기할 ‘선거연령 인하’ 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다 잘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이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민의’ 를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청소년 그 자체의 자질에 관한 쟁점과, ‘선거연령’을 둘러싼 세계적 추세, ‘선거연령 인하’가 미칠 사회적 영향 등의 외부적 쟁점으로 나누어 본 사안에 대해 고찰해보았습니다. 앞서 제시한 근거에 따라 이 모든 쟁점을 다각적으로 고려해도,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말하며 입론 마칩니다. | | | | |
| **반대**  **입론** |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며, 현재 선거연령인 만 19세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미 2005년, 만 20세이던 당시 선거연령을 헌재는 19세로 낮추겠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권을 침해한다” 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8세의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 19세와 18세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만 19세와 18세, 경우에 따라서는 불과 몇 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두 그룹의 ‘성숙도’ 는 어쩌면 크게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같은 이유로 만 17세 만 16세, 극단적으로는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투표권을 줄 수 있는 연령의 ‘하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쟁점은 선거 연령의 ‘하한선’을 몇 살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팀은 앞서 언급한 비탈길 오류와 더불어 다음의 2가지 근거를 더 들겠습니다.  첫 째, 현재 선거연령인하는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김영란법 재정(찬성 64%, 반대 7.3%, 잘 모르겠다. 28%, 리얼미터 2015)과는 다르게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할 만한 여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 이며, 이러한 현 상황에서 여론 통합의 과정 없이 선거연령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유, 무형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우리는 대표적인 무형의 사회적 비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 째, 청소년기는 정치적 시민성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보통 13세에서 18세는 정치적 민감기로 분류되며 이때 정치적 의식과 태도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발전하며 이 때 형성된 정치적 성향은 이후 성인기의 시민성을 크게 규정한다고 말합니다.(김세균, 정치학의 이해) 즉 청소년기에 특정 정치 성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것이 신념화 되어서 후에 정치적 판단을 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어 18세가 선거권을 획득한다면 학생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선거 홍보가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제도권 교육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같은 공간, 같은 공동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접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독립적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선거 연령 하향은 18세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써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대다수가 정식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모두 행사 할 수 있을 때인 만 19세로 선거연령을 정하는 것이 한국 실정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입론 마칩니다. | | | | |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참가자 2** | |
| **이 름** | 강\*\* | **이 름** | 하\*\* |
| **소속(학과)** | 글로벌경제학과 | **소속(학과)** | 경제학과 |
| **학 번** | 2015 | **학번** | 2013 |
| **연락처** |  | **연락처** |  |
| **이메일** |  | **이메일** |  |
| **팀 명** |  | | |
| **주 제**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성균 토론대회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방법론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하는 지적인 사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하승완 및 강창현은 비록 다른 여타의 참가자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선거연령 하향 조정해야 하는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인 선거권에 관련된 토론에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토론대회의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국에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면서 기본소양인 토론 역량을 평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의의와 함께 선거권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 6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7개국 중 77퍼센트에 해당하는 144개국의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하이며 이는 젊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현안에 대해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권한 부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은 단순히 무비판적으로 세계적 추세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촛불시위, 학생운동 등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단순히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진정한 민주주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참정권 확대에 따른 민주주의의 확대를 보장합니다. 청소년의 선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에 따른 민주주의의 확대는 그 자체로 청소년 정치 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
| **반대**  **입론** | 헌법재판소 판례를 찾아보면 “보통선거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고,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보통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을 몇 세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결정이 있다. 입법자는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사항과 연령별 신체적, 정신적 기본권 수행능력 등을 포괄하여 선거연령을 결정하게 되며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을 경우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하여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 규정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 흡연 등 일부 합법적 기본권 제한의 영역의 법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정치적 상황판단을 바탕으로 현재 만 19세를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국민감정 및 의식을 고려해 다른 여타 규정과 동일하게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가?”의 찬성 논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이 ‘공정성’ 및 ‘합리성’에 저촉되는지를 선결과제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소한의 공정성과 합리성은 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Ethos, Pathos, Logos” 의 논리적, 이성적 소구방법이 우선적 부정되면서 정권획득에 관한 목적성을 감안했을 때 도덕적 수용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반대측은 세계적 추세, 기본권수행능력에 의거한 하향 조정 요구 등이 선거권 하향 조정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법자의 공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어긋난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의거하여 규명됐을 때 하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만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심지어 선거 연령 조정의 당위성이 인정됐을 경우에도 기타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선거 연령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석하며 하향 필요성을 부정한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참가자 2** | |
| **이 름** | 양\*\* | **이 름** | 이\*\* |
| **소속(학과)** | 글로벌리더학부 | **소속(학과)** | 글로벌리더학부 |
| **학 번** | 2016 | **학 번** | 2016 |
| **연락처** |  | **연락처** |  |
| **이메일** |  | **이메일** |  |
| **팀 명** |  | | |
| **주 제**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저희는 대학교 입학 후 과 동기이자 첫 룸메이트로서 서로를 만났습니다. 과 동기이기도 하고 함께 방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친해졌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과이다 보니 공부를 함께 하면서 법과 관련한 공부를 함께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치관이 비슷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지만은 않았고 때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줄 알았으며, 이런 점이 서로에게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에 비록 다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으나 스피치와 토론이라는 같은 과목을 수강하였고 토론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토론과 같은 진지한 주제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큰 고민이나 어려움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팀명은 라틴어로 ‘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logica(로지카)입니다. 저희는 토론이란 논리성을 겨루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입에 아무리 새롭고 좋은 논거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이 자기모순을 범하면 치명타가 되는 것이 토론이고, 아무리 오래되고 자주 논의되는 논거이더라도 철저한 논리와 근거로 뒷받침된다면 훌륭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이라는 형식을 벗어나서도 논리적 말하기는 큰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명을 라틴어로 정한 이유는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 때문입니다. 한국어가 존재하기 이전에, 영어가 존재하기 이전에 라틴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은 치열하게 논박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그때의 정신과 오랜 논리의 역사를 가지고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logica라는 팀명을 정하였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찬성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만 19세 이상에게만 부여되는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는 선거권 가능 연령을 무한정 낮추자는 것이 아닌 만 18세로 확대하자고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자신의 삶과 이익을 대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주주의란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일치하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사안에 대해 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박탈당하고, 관행적으로 억압당해왔습니다. 연령 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부여 받지 못하고, 다시 이 때문에 자신이 영향을 받는 정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11년의 학생인권조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그들의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였지만 청소년들은 주민 발의 서명조차 할 수 없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상급식 또한 비슷한 사례입니다. 제도의 대상자는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상화되어 자신의 권리를 일종의 시혜로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권리라는 기본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실시한 <2012 대선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 조사>의 결과와 실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교육 부문 공약을 비교해보면 심하게 불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소년에게는 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수많은 정치인들에 의한 교육공약들도 청소년을 위하고 의식한 공약이 아닌, 표가 있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기타 교육관계자를 겨냥한 공약입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들이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지켜져야 할 정당한 결과입니다.  둘째,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충분한 정치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바탕이 되는 전제는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고,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령’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으로 삼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각 개인별로 성장의 정도가 다르고 사회의 발전 정도와 교육수준의 정도가 유동적이고 발전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기대학교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능력 비교 기준으로서 ‘능력’의 인간의 이성작용의 중심이 되는 합리성으로 정하고, 합리성의 비교를 위해 인간의 인지능력 발달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청소년들을 성인보다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존재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Piaget,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 도덕성발달이론, Moshman의 논리적 추론능력 발달 연구결과 등에 의해, 대부분의 인지능력이나 도덕성, 자율성 등은 주로 10대 초반에 이미 성인 수준으로 발달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등교육수준이 예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발달한 점, 교과과정의 저학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활발히 진행되는 정보화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전의 성인연령기준은 유명무실하며, 이전과 현재의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은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그 의식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하여 세대별 의견이 불균형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 연령 인하로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총인구 5107만 명 중에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657만 명으로 13.2%를 차지한다. 이 속도라면 대한민국은 2020년에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경제부문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사회의 요구가 균형 있게 수렴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투표율에서 50대는 67,3%, 60대는 70.5%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라 할 수 있는 20대는 37.7%의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9세 선거권 계층의 투표율은 42.5%로 30대에 근접한 투표율을 보이며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면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사회에 투영됨과 동시에, 참여의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실현되고 정치 발전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세대별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라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미래세대의 목소리 반영은 필수적입니다.  민주사회의 발전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 구성원은 적극적인 자질을 가진 시민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성장과정에서 경험과 실행을 통하여 길러지는데,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정착된 사회에서 이러한 자질을 청소년들에게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한 민주적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반대**  **입론** |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는 한 나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매우 중대한 절차입니다. 때문에 선거권은 책임감은 물론 정치적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현행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를 통해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은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조정 대상은 만 18세로,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2014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만 18세는 685,501명, 그리고 같은 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중 18세는 617,776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공부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 입시교육의 특성상 제대로 된 정치교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에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왜곡된 정보의 가능성과 정치적 선동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폐쇄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왜곡된 정보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과정 아래에서 청소년들은 올바른 투표를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선거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 국민들의 의식수준, 교육적 요소와 정치 상황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만 19세보다 낮은 선거연령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무작정 편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정치제도가 자리 잡은 시기와 어린 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교육의 정도, 정치의 양상들이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세계적 흐름만을 좇는 것은 미숙한 판단입니다. 또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의 차이는 성년의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를 미성년과 성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에 반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성년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가능연령이 우리보다 낮은 만 18세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만 19세는 대학 진학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지적 능력과 판단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대입이 만 19세가 되는 해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해당하는 청소년기는 교육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Kohlberg의 청소년기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지발달 과정상에 놓여있는 청소년기에 교육자나 지도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자의 권위가 지켜지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아래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때문에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학생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청소년들이 교육자의 이념에 선동되거나 교육적으로 중립이 지켜져야 할 공간인 학교가 정치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 31조 4항에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법 제 96조와 제 102조의 2항, 그리고 제 107조 역시 대학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케 하는 선거권 부여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청소년의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의 법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 절차상 합법적이었으므로 법률 개정의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우선 헌법 2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법률이란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 만 19세가 되어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법률에 기초한 선거권 연령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자체에도 그 결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미 저희가 앞서 세 가지 근거를 통해 설명 드렸듯 국회에서도 선거연령하향이 초래할 부작용을 고려한 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몇 차례의 헌법소원청구에서 현행법이 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논리적 결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헌법적 근거가 아니라 이를 제한하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의 ‘포괄적’의미의 자유권을 성격을 가집니다.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거나 헌법 제37조 제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만 19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불과한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정치적 판단능력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수 차례 존재합니다.  민주주의가 확산되어 보다 건강한 시민의식과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 찬성측을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란 영원히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올바른 정치문화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능동적인 주체, ‘곧’ 투표할 ‘사실상의 유권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들에게 섣불리 투표용지를 쥐어주기 보다는 판단력 있는 성인으로 그리고 유권자로 나아갈 교육을 선행하여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참가자 2** | |
| **이 름** | 장\*\* | **이 름** | 장\*\* |
| **소속(학과)** | 경영학과 | **소속(학과)** | 글로벌리더학과 |
| **학 번** | 2016 | **학 번** | 2013 |
| **연락처** |  | **연락처** |  |
| **이메일** |  | **이메일** |  |
| **팀 명** |  | | |
| **주 제**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의 가치를 매우 높이 여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내에서 토론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 중이었는데요, 동아리 활동 중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매우며 좋은 토론을 이끌어 가도록 돕는 파트너로서 서로가 알맞다고 판단하여 저희 둘이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사랑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으로서 성균토론대회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내에서 토론에 대한 저희의 애정을 유의미하게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지금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해야 하는가’ 의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만19세 이상부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현행제도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한 많은 구성원이 투표권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 나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만 18세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만 18세가 어떠한 근거로 투표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국민인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근거로 인터넷, 휴대폰 등의 발달과,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등이 매우 발달하여, 아주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모두 페이스북이라는 말을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란 가장 많은 이용자를 지닌 SNS 인데요, 사용자 중 10대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들 10대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인 만큼 가벼운 주제의 내용들만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긍정적인 행보들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항들이 공론화 되고, 학생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직접 움직이기 위해 토의하고 설득하는 방안으로 SNS를 이용하는 등의 상황이 그것입니다. 현 시국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국선언공표, 수험생들의 시위 참여 등이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보아도 단순히 고등학생들이 입시에 묶여있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하며, 참여 의식이 없다는 발상은 고등학생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반대**  **입론** | 지금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해야하는가?’의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권 제한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의 도래 이후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 그리스에서는 여성, 외국인의 선거권을 제한하기도 하였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인종, 경제적 수준 역시 선거권 제한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현대 사회에서 마땅히 부정되어, 현재는 연령만이 선거권 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에 대한 제한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절한 연령이 어느 정도인가는 논의될 필요가 있겠지요.  저희 반대 측은 그 적절한 연령이 현행 19세임을 주장합니다. 이번 입론을 통해서 선거권 연령 제한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반대 측의 주장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선거권 연령이 19 세로 정해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선거권 연령이 규정된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가는 왜 선거권을 연령을 규정하는 것일까요? 선거권은 생명권과 같이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인권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이 창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다른 권리와는 달리 일반적 제한이 정당화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권리의 제한이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근거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보편’이라 함은, 선거라는 것이 다수를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기에 그 제한 역시 같은 원리로 적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령은 가장 보편적으로 선거권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당’이란 선거권이 요구하는 요소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됩니다. 선거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성장, 정치 참여가 가능한 사회 환경입니다. 저희는 생물학적 성장에 대한 논의는 지양하고 싶습니다. 이는 누구도 명확히 증명하기 힘들며, 단지 추정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 환경적 요소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19세라면 92%가 졸업하는 고등학교라는 사회 환경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보편타당한 제한을 위해서, 절대 다수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선거권 연령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9세를 기점으로 고등학교라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의 지도아래 집단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벗어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 순수한 의사 반영을 필요로 전제로 하는 선거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합니다.  첫째,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즉, 정치적 의사를 수집함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개입합니다. 물론 한 개인이 타인의 입장을 듣고 비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즉, 사제라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의사의 일방적 전달이 가능하며, 그것은 일반의 경우보다 학생에게 쉽게 수용될 것입니다.  둘째, 집단에 소속되어야 하는 학생의 입장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대중영합주의입니다. 중우정치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신의 합리적 판단이 아닌 대중의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래의 친구들과 지내는 고등학생의 경우 그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는 다수의 의견에 자신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외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반면,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속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입시라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선거권에 있어서는 출마한 후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선거에 필요한 정치적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시라는 인생의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며, 어느 정당에 속하고 또 그 정당은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 입론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입론에서 선거권 연령이 어떤 원리에 의해 규정되는지 밝히고, 그것을 근거로 고등학교라는 사회 환경적 요소를 중점으로 적절할 선거권 연령이 19세임을 입증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참가자 2** | |
| **이 름** | 엄\*\* | **이 름** | 오\*\* |
| **소속(학과)** | 철 학 과 | **소속(학과)** | 사회과학계열 |
| **학 번** | 2012 | **학 번** | 201 |
| **연락처** |  | **연락처** |  |
| **이메일** |  | **이메일** |  |
| **팀 명** |  | | |
| **주 제**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안녕하세요. 저희는 <벌써 6년>팀 엄익호, 오미림 입니다. 두 토론자의 나이차이가 6살이나 나서 지은 팀 명입니다. 한 명은 대학생활을 해 볼만큼 해본 복학생, 한 명은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한 새내기로 이루어진 저희 팀은 대학생활의 시작과 끝에 서서 대학생활 중 갖는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는 토론을 할 수 있는 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토론은 무엇보다 세상을 개선해나가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진리는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설득됨 속에, 모두의 합의 속에 논리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며 두 청년들이 앞장서서 진지하게 삶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로써의 뜨거운 토론, 다름을 배우겠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첫째, 민주주의 실현, 둘째,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 셋째, 선거권 연령의 국제적 추세.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선거권 연령 확대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본론에 앞서, 저희가 논의할 청소년이 범위는, 만 13세부터18세까지의 법적 청소년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거권 연령의 확대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곧,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롯이 국민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가능한 한 일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전체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직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제를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즉, 선거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 받는 선거에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을 부여 받지 못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국가의 일원으로써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최고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주권 행사의 통로인 선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둘 째, 청소년들은 충분히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20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된 2005년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평균적인 지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함으로써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평균의 지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올바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해지는 연령층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 연령층이 확대됨에 따라서 선거권 연령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과거 국민의 평균 지식과 의식수준에만 머물러서 오늘날의 선거권 부여 대상을 규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도 선거권 연령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11년 기준 전 세계의 약 93%정도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 32개국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단 두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또한 2010년 시행된 국민투표법에서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 또한 18세로 하향하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선거권 하한연령이 만 18세인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이를 16세로 하향하자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확대시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의 물결은 우리나라 또한 선거권 연령을 현재보다는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민주주의의 실현, 둘째, 청소년의 정치판단 능력, 셋째, 선거권 연령의 국제적 추세를 근거로 선거권 연령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 째 입론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반대**  **입론** | 지금부터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다음의 논거를 들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거 연령을 낮추게 되면 민주주의를 저해하게 됩니다. 둘째로 교육현장이 정치화되어 훼손됩니다.  우선 첫째로 선거 연령을 낮추게 되면 민주주의를 저해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체제입니다. 한 명의 유능한 지도자가 이끄는 군주정이 아닌 공화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수의 국민의 의식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의식수준은 무엇보다도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판단해볼 수 있겠죠. 한국방송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의 투표율은 정확하게 나이에 정비례했습니다. 투표행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민주시민의 의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부정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처럼 단순히 유권자를 늘리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와 인기영합주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선거 연령을 낮추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될 것이 있습니다.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과 관련된 법들이 선제적으로 정비되어 개정되어야 하며 정치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책임도 부여하기 전에 권한을 부여한다면 매우 큰 위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사람은 책임은 피하고 싶고 권리만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권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책임을 먼저 지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현장이 정치화되어서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가치가 아닌 작은 의미의 민주주의가 교육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정치를 판단할 때가 아니라 정치로 보호받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무 살부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돈을 벌지 않고 스스로 역량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가 누구에게나 능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첨이 아닌 선거를 하는 이유입니다. 절대로 저희 반대 측은 당연하게 부여해야 할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희는 권리를 빼앗자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4대원칙에 의거 모든 국민은 때가 되면 개인의 역량과는 별개로 모두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기의 차이이지 극복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중국의 제자백가 중 노자의 말에 따르면 정치는 ‘무위의 치’가 실현될 때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가 무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현재 여러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뜻 또한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정치참여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개개인의 성장도 중요합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여당과 야당의 정쟁에 매몰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청소년들도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치아를 썩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3 수험생에게 선거운동을 해야겠습니까? 교사들이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해치는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야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쥐어주고 사회로 떠미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을 잘 보호하여 후일을 도모하는 백년대계의 교육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함이 맞습니까? 이상으로 반대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참가자 2** | |
| **이 름** | 박\*\* | **이 름** | 국\*\* |
| **소속(학과)** | 공학계열 | **소속(학과)** | 사회과학계열 |
| **학 번** | 2016 | **학 번** | 2015 |
| **연락처** |  | **연락처** |  |
| **이메일** |  | **이메일** |  |
| **팀 명** |  | | |
| **주 제**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안녕하세요 공학계열 박수헌, 사회과학계열 국가을입니다.  저희가 토론대회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학년이기 때문에 교내외로 많은 경험을 쌓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학교발전홍보대사 S-ANGEL의 회원들인데, 저희 단체의 주요 활동은 여러 동문 선배님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토론에 사용되는 논리적인 사고와 순발력 그리고 대응력이 개인의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캠퍼스가 다르지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안녕하세요, 입론을 맡게 된 박수헌입니다. 선거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단체의 대표자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민이 갖게 되는 시민권을 표출하는 것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성장 상태는 어른들의 그것과 비슷하여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타인들은 청소년인지, 어른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고, 최근 일어난 여러 집회에서도 여고생이 옳은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정보 매체들의 발달로 청소년이 어른들에 비해 정보력적으로 뒤진다고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보적으로도 어른들과 구분하기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명백하게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알맞게 현재 선거법의 만 19세 이상만 선거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선거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역에 대한 조항도 만 18세 이상부터 입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도 그 위의 나이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보력의 측면에서도 청소년이 뒤지는 측면은 없습니다. ,흔히 ‘애들은 생각이 어리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경험의 차이입니다. 예컨대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해 본 청소년들은 오히려 사회적인 경험이 적은 어른보다 ‘생각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정보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들은 정치나 선거, 후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정치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선거 연령을 하향화하고, 그에 대한 교육이 수반된다면 청소년이 선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선거의 의미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
| **반대**  **입론** | 요새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스캔들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잘잘못을 떠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이 나라 전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의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이러한 소설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선거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대표자가 얼마나 크나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셨다면,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저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볼텐데요, 첫째는 대체로 청소년들은 선동에 이용되게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의 소위 ‘지라시’를 유포한 주범으로 검거되는 경우는 실제로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청소년들의 SNS를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고, 그로 인해 선동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는 것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선거가 아닙니다. 정치를 하기에 옳은 사람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선동에 더 힘쓴 사람이 뽑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선거 가능권에 유입된다면, 후보들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는 시간을 줄여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동할 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시민이다’라는 논거가 도출된다면, 몇 살까지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연령에 따라, 만약 너무 어리게 설정된다면, 후보들이 당선되었을 때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세번째로, 어떤 단체를 처음 들어가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된다면, 사람들은 인턴 등의 배워가는 시기를 거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인생을 배워가는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법도 그네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 준법정신을 가르치려 하지,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 몇 년 동안은 어른들의 옳은 선택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옳지 않았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습득한 후에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암묵지 없이 실전을 경험하게 된다면, 물론 실수와 경험이 더욱 나은 안목을 길러 낼 수도 있지만, 선거는 청소년들의 체험의 장이 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입론 마치겠습니다. |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 **참가자 2** | |
| **이 름** | | 하\*\* | **이 름** | 이\*\* |
| **소속(학과)** | | 전자전기컴퓨터계열 | **소속(학과)** | 자연과학계열 |
| **학 번** | | 2015 | **학 번** | 2016 |
| **연락처** | | 010 | **연락처** |  |
| **이메일** | |  | **이메일** |  |
| **팀 명** | |  | | |
| **주 제** |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 **저희는 제 6회 성균 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된 팀<토론44>입니다. 저희는 스피치와 토론 수업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함께 수업 시간을 통해 스피치에 대한 이론적 기초들을 배우고 두 번의 실습을 거쳐 의사소통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교내 토론대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셨고, 저희 둘 모두 흥미를 느껴 대회에 출전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주제는 ‘선거 연령 하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저희의 관심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저희의 나이는 만 19살로 올 해 처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올 4월에 있었던 총선에 참여하며 한 표 한 표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느껴, 이 주제에 대한 흥미가 컸습니다. 덧붙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적 기초들을 실제로 적용시켜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고, 작은 분반 속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저희의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교내에 실력자들을 만나 저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깨닫고 더 발전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 | |
| **찬성**  **입론** | **가장 먼저, 선거 연령 하향은 참정권 확대, 즉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해석하면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입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1920년대에는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집단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는 흑인이라는 집단이 선거권을 획득해 민주주의가 한 층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여성 또는 흑인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존재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집단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으로써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할 기회를 갖고, 선거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 표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금까지 작게는 학급부터, 넓게는 학교, 혹은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집단에서 다양한 선거들을 경험했고, 이러한 간접적인 정치 참여들로 쌓은 경험이 실제로 선거를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조기 인생공부가 됨은 물론이고, 선거의 중요성을 느껴 올바른 선거 습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 습관이 청소년기에 확립된다면 그것이 투표율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도 정치, 사회적 판단력이 성숙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습니다. 만 18세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데, 이들은 민주 국가에서 필요한 덕목들을 약 12년간 교육받은 학생들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정립 교육을 받았다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미숙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율만 봐도 학생들이 정치적 사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심지어 이번 학년도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고3 수험생들까지도 시위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번 시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활동들에도 청소년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선거 연령이 하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
| **반대**  **입론** | **가장 먼저, 선거 연령을 낮춘다 하더라도 투표 참여율의 변화는 미미한 반면 선거 비용은 크게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일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질 경우, 약 100만 명의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약 30억 원 이상의 비용 소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추가 비용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율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도 문제점입니다. 만 18세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다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 생활, 대학 입시 등 많은 실질적인 고민거리들을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정치에 능동적인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는 숫자는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는 인구수를 올리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은 아직 미성숙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그 시기에 자아가 확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군중심리가 강합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심지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 한 줄에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본인의 정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당장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 보다는, 더 나은 후보자를 찾을 수 있는 정치적 안목을 갖추고 자신만의 정치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멀리 봤을 때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논거와도 일맥상통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올곧은 정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순수한 청소년들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접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 의식을 일찍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선거 연령의 하향’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불순한 정치관을 심어주는 사태를 일으킨다는 모순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이 아닌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선거 연령의 하향을 반대합니다.** | | | |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참가자 2** | |
| **이 름** | 김\*\* | **이 름** | 박\*\* |
| **소속(학과)** | 소프트웨어학과 | **소속(학과)** | 소프트웨어학과 |
| **학 번** | 2016 | **학 번** | 2016 |
| **연락처** |  | **연락처** |  |
| **이메일** |  | **이메일** |  |
| **팀 명** |  | | |
| **주 제**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저희는 소프트웨어학과 16학번 동기 두 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들으며 다른 학우들과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껴,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 뿐 아니라 성균관대학교의 다른 학생들과도 소통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청소년 역시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의무를 부여 받으므로, 권리 역시 가질 자격이 있다. 18세의 청소년들은 이미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제도적으로 여러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이러한 의무들은 지우면서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또한 선거권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인정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권리이다. 청소년 역시 사회구성원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 상황에서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좀 더 젊은 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20대 총선을 보면 20대의 투표율은 49.4%, 30대가 49.5%, 40대가 53.4%, 60대 이상이 70.6%의 투표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으며, 이는 젊은 층의 목소리가 우리나라 정치에 반영되기가 힘들 수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존재는 청장년층이며 이들의 목소리는 분명 사회에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게 된다면, 청년층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청년층과 노년층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셋째, 선거권 하향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2011년 기준 232개 중 92.7%정도(215개)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OECD 회원국 34개 국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이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하향함으로써 대한민국은OECD국가중 선거권을 19세 이상 에게만 부여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심지어 18세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시장이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로 보고 있고, 실제로 과거에 18세 시장, 19세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례역시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은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선거권 조차 없는 상황이다. |
| **반대**  **입론** | 첫째, 고등학교 3학년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평일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학습에 쓰이는 시간은 평균 11시간 3분, 수면 및 식사에 쓰이는 시간은 9시간 22분, 교제 및 여가에 쓰이는 시간은 평균 1시간 47분으로, 학업에만 집중하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잠 잘 시간도 부족한 고등학생들이 전반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을 가질 리 만무하다.  둘째, 고등학생은 아직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작아 주변환경에 의해 쉽게 정치적 성향이 바뀔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정치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님으로 약 30퍼센트를 차지 하였고, 인터넷 및 SNS가 20퍼센트, 학교가 12퍼센트, 친구가 13퍼센트로,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동조현상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끼치며 정치적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정치적 시야가 축소되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아직은 사회경험이 적고, 비판적 사고능력이 작은 고등학생들은 자신만의 확실한 주관이 없어 주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학교에서 정치색을 띌 우려도 있다. 교육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띄어야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참정권을 얻음으로써 학교라는 기관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셋째, 고등학생은 아직 자기 사고를 똑바로 세울 기회가 없다. 고등학생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적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며 정치를 생각화는 수업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이과 학생의 경우 학교 과목이 수학, 과학 분야에 편중되어있어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또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낮으며 이는 다짜고짜 선거 연령을 낮추기 보다는 사회적, 구조적으로 먼저 청소년에 대한 정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이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참가자 2** | |
| **이 름** | 박\*\* | **이 름** | 박\*\* |
| **소속(학과)** | 유전공학과 | **소속(학과)** | 소프트웨어학과 |
| **학 번** | 2015 | **학 번** | 2016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이메일** |  | **이메일** |  |
| **팀 명** |  | | |
| **주 제**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대회의 취지 중 하나가 율전캠퍼스와 명륜캠퍼스간의 화합인 만큼 팀 이름을 어울림으로 지었습니다. 토론 대회도 경험해볼 겸 상금도 노릴까 하여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선거연령은 현행보다 낮춰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청소년은 충분히 성숙한 존재입니다. 둘째 청년들의 미래를 노년층이 결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민주주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소년은 충분히 선거를 하기에 성숙한 존재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이뤄지고 다양한 대중매체로 활발한 정보교류가 가능한 사회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향상된 교육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충분히 정치,사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들에겐 간접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내 회장선거나, 청소년 자치기구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들을 통해 정치참여의 과정과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에 충분히 성숙하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수차례 증명되었습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는 당시 18세 였고,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는 당시 17세 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집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집회의 주축으로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청소년기에도 충분히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만 18세부터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어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18세 이상이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807조,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인 국민에 대해 성인으로서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의무를 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다는 근거에서 입니다. 납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 등 국민의 의무들은 지게 하면서 투표권 행사라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두번째로 청년들의 미래를 노년층이 결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세대는 정책에서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모든 국가들의 선거연령은 18세 부터이고,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청소년 보호법의 확산과 같은 청소년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곧,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수렴되는 선거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장년층 비중이 매우 높은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 연령이 유지된다면 정책들은 노년층 위주로 펼쳐질 것이며, 청년세대들의 미래를 노년층이 결정짓는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참정권의 확장은 민주주의의 확장입니다. 흑인, 여성, 장애인을 넘어서 의식을 갖춘 청소년들까지 시민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정권을 얻고 나서야 흑인, 여성들은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사상의 자유, 발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발전이고 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성장시켜 청소년들이 더 정치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정치참여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자신만의 정치관을 세울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커서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은 입시에 얽매여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율 또한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견 표출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더욱 확대시킵니다. 또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선거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섣부른 주장입니다.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선거권을 받지 못한다면 투표율이 저조한 세대의 표는 다 빼앗겨야 합니까?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반대**  **입론** | 안녕하세요? 오늘 논제인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하는가”에 대해 첫 번재로 발언하게 된 \*\*\*이라 합니다. 저희는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미숙합니다.  대선이나 총선은 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국방, 국제정세 등에 대한 전방위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기에 충분하지 못 합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실업학교, 종합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에서까지 정치교육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교육과정에서는 독일의 가치와 이념, 국제관계도 배워야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이런 교육환경과 사회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과연, 긴 시각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둘째, 실효성이 없습니다.  만약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한다면 약 50만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깁니다. 만 16세로 인하한다면 약 130만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깁니다. 당연히 새로 추가되는 유권자만큼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에 반해,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은 적습니다. 최근 투표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젊을수록 투표율이 점점 낮아져서 20대에 이르러서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표 수는 많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확장, 민주주의 실현.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실질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들은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소지가 큽니다.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선생님께로부터 받는 영향, 그 나이의 특성인 또래 문화로 인해 받는 영향,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보원인 인터넷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 영향. 더 나아가,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수 있는 집단들의 영향까지. 주체적인 판단의 가치가 서있지 않은 청소년들로서는 피선거인에 대한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보다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영향에, 한 후보로 쏠리는 현상까지 일어난다면 더더욱 피선거인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아직까지는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참가자 1** | | **참가자 2** | |
| **이 름** | 송\*\* | **이 름** | 소\*\* |
| **소속(학과)** | 공학계열 | **소속(학과)** | 공학계열 |
| **학 번** | 2016 | **학 번** | 2016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이메일** |  | **이메일** |  |
| **팀 명** |  | | |
| **주 제** |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팀 소개)  ‘스피치와 토론’수업에서 만난 친구와 이 토론 대회에 대해 듣고, 저희 둘다 이번 대회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같이 합심하고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원동기)  송한주: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제가 이화여대에 다니고 있는 여자친구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물론 직접 시위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대자보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는 정치에 관해 일상에서도 자주 친구들과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 대학교에서 제가 듣는 과목인 ‘스피치와 토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번 토론 대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추천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과 잦은 정치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던 저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토론 대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지사항을 찬찬히 읽어보았더니 주제 또한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미 경험한 내용이기에 이 토론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대회를 같이 할 팀원을 찾던 중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를 ‘스피치와 토론’ 시간에 만나 같은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저는 토론의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팀원과 함께 원하는 주제를 서로 상의하고 토론 대회를 나가서 다른 팀과 토론을 하여 저의 생각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해 저의 생각 말고도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병준: 요즘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생기던 와중에 이 토론대회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듣는 순간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나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여 의견이 맞는 친구를 찾아 같이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떄는 선거는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대충 알아보고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자신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주제를 보고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해 공부를 할 겸 나의 의견을 표출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
| **찬성**  **입론** | 선거의 취지는 흔히 말하는 지식인인 교육받은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국민의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자는 뜻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런 선거의 취지를 바탕으로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에 대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자들은 만 19세 이상인 저희들의 선거에 의해 뽑히는데요. 그렇게 뽑힌 정치자들이 저희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인데요.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도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은 독자적인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국민이지만 국가로부터 영향만 받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지요.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교육감 또한 그들이 뽑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뽑는 것과 같죠.  선거란 우리가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할 일이 있기에 또 우리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출마했을 때 그 사람을 뽑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즉, 출마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과 공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지식만 있으면 선거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시국선언 내용들을 보면 웬만한 성인들보다 내용이 좋습니다. 최근에 수능이 끝난 청주상당고 학생들이 연단 위에서 시국선언을 할 때, 8000여명의 시민들이 뛰어난 내용 구성에 박수로 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되고있는 다른 사례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송민재(16)군의 뛰어난 시국선언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지적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선거권이 없어 그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야 시위에 청소년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도 관심을 갖으면 성인 못지않게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스위스 철학자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15세 정도가 되면 이미 성년과 같은 정도의 인식 틀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정보의 양이 풍부해지는 차이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이 교육 강국인 것과 청소년의 IQ(평균 지능 지수)도 세계적인 수준인 것을 익히 아실 겁니다. 그 증거로 2016년 11월 18일 기준으론 영국 아이큐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 순위는 전세계에서 3위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는 나라인데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한, 만 19세가 되어 갑자기 선거권을 갖은 성인들도 선거를 하려니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잘 이끌어 줄지, 우리 대신에 일을 잘 해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투표를 안하거나 아무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선거는 지역 감정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한 문화에 의해 지역감정에 따른 정치적 성향이 적고, 선거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기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성인들보다 더 좋은 표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소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으면 그들도 성인만큼의 판단력을 갖을 수 있고 그 관심으로부터 성인이 되서도 투표율을 올리며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
| **반대**  **입론** | | 선거는 자신이 무작정 원하는 사람을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정하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여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런 선거의 취지를 바탕으로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선거인데 아직 경험과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결정입니다. 본래 학생의 직책은 꿈을 찾고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게 되면 선거기간에는 정치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그들의 공약을 찾아서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등등 여러가지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공부하기에도 바쁜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선거도 성실히 임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이런 교육 특히 수능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공정한 투표가 가능해질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이 평소에 많이 보는 SNS의 허위 사실들이나 주위 어른들(부모님)의 의견에 의해 쉽게 선동 당하기가 쉽습니다. 약 한달전에 YTN뉴스의 전문적인 기자들이 현 SNS의 대가라고 불리는 페이스북의 허위 사실을 그대로 사실인 줄 알고 뉴스에 공표하여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문가들조차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SNS를 과연 비전문적인 학생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 에서처럼 아무런 의심없이 무심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 죽은 학생들이 과연 주위의 말들에 선동되지 않고 소신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는 학생들은 집단적인 성격을 띄어 한 친구의 의견과 논리에 쉽사리 현혹되기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과연 저희들이 기대하는 제대로 된 민주적인 선거를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의견으로, 학생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겪는 사회적인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겪기 힘들어 선거가 어느정도 영향을 갖는지 인식하기 힘듭니다. 즉, 현재 선거 가능 나이가 만 19세부터로 정해진 이유도 그때부터 사회를 직접적으로 겪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거를 하여 생긴 변화가 직접적으로 와 닺지 않아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정작 선거를 통해 생긴 변화를 느낄 만한 성인이 되었을 때 투표율이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적은데 선거 연령을 낮추면 더욱 관심이 줄어들게 되어 청년들의 의견을 포함하는게 쉽지 않아집니다. 또한 선거 연령을 하향하여 선거 참여 인원이 늘어나 투표율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극심이 낮은 투표율을 올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않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성인들 중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런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꾸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정한 34개국의 OECD 국가들도 먼저 어느 정도 투표율이 안정적으로 높아진 후 선거연령을 하향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선거 투표율이 낮은 근본적인 문제들부터 해결하여 현재 선거 연령에서의 비율을 높이고 나서, 선거연령을 하향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 투표율은 75.6%이며 점점 하락하는 기세입니다. 만 18세 이하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미만으로 통계 되어있습니다. 그중 10~18세 인구는 10% 정도로 골고루 분포 되어있는 가정하에 고등학생 수는 약 3%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31.2%로 당선이 된 박근혜 대통령과 28.8%로 2위가 된 문제인 후보의 상황을 보면 선거연령을 하향한다 하더라도 영향이 미미하여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고등학생 모두가 문제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모두가 투표를 하는데 한쪽으로 쏠린다는 가정이 없으면 선거연령을 낮춘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는 투표율이 증가할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